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4면
팔복동 산단 배후지, '녹색마을' 된다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2년 3월 3일 목요일 (음 2월 1일) 제296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도, 새만금 국제공항 후속절차 본격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 마쳐 기본계획 고시 나서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핵심 관문이었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난달 28일 완료됐다. 이번 협의 완료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결정에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는 2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남에 따라,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 절차에 본격 돌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제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작년 9월 국토부가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했으나, 환경부가 조류 및 법정보호종 영향 검토 등을 이유로 2차례 보완을 요구하면서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1월 국토부가 제출한 2차 보완제출사항에 대해 환경부가 2월 28일 드디어 협의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함에 따라 5개월의 노력 끝에 협의를 마무리 짓게 됐다.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기재부와의 사업비 협의, 관련기관 협의, 국토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해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사업 추진방식이 결정되는 등 단계적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조기 건설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 관련 부처 등과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된 공항 사업인 만큼, 도는 앞으로 공기단축 방안을 강력히 건의하는 등 사업속도를 최대한 높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민선 6기부터 도정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온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완전히 제 궤도에 오르게 됐다.

그간 공항 건설에 대한 전북도의 의지는 집요하다는 표현이 떠오를 정도로 강력했다.

2014년 민선 6기가 시작되자마자 자체적으로 공항 수요 용역을 추진하는 등 논리 개발에 나섰고, 2016년에는 제5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새만금 공항건설을 반영하면서 청사진을 그리는 데 성공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과 100대 국정과제에 새만금 공항건설이 반영됐으며, 지난 2019년에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에 선정,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으면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그리고 이번에 대규모 건설 사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서 착공을 위한 난제가 해결됐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도는 논리개발 등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의와 함께,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을 염원하는 도민과 이원택 국회의원 등 정치권, 각계각층의 응원과 노력이 큰 힘을 발휘한 덕분이라고 전했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앞으로 공기단축 방식 도입 등 후속 행정절차가 빠르게 완료되도록 도정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공항뿐만이 아니라, 도로와 항만, 인입철도 등 새만금 내의 육해공 물류 트라이포트를 조속히 완료해 전북발전을 이끌 출력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고, 새만금 국제공항이 세계적인 친환경 명품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새만금 국제공항은 기본계획고시, 대형공사입찰방식 결정,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등을 거쳐 오는 2028년 완공될 예정이다. 도는 2050년 새만금 국제공항의 수요가 84만명으로 예상되고, 새만금 내 투자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향후 새만금 발전을 좌우할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인구감소 대응 추진단'을 구성해 관련 실국장 등과 첫 회의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

전북도, 인구감소 대응 추진단 구성 후 첫 회의 열어
일자리 · 도시인프라 · 교육 등 6개 분야 투자사업 발굴

전북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인구감소 대응 추진단'을 구성해 관련 실국장 등과 첫 회의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추진단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일자리·경제·산업, 도시인프라환경, 농업농촌·해양, 의료·건강·다문화, 문화관광·체류인구, 교육 등 6개 분과, 관련 실국과 전북연구원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 각 분야 투자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도는 지방소멸 대응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군 연계협력사업 및 광역단위 프로젝트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분야별 인구활력을 증진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 조성사업 위주로 투자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금사업을 마중물로 활용, 국고보조·기존 자체사업 등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패키지 형태로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자계획 평가를 통해 기금을 차등배분 받는 시·군을 위해 시·군별 여건분석 지원, 시·군 소통협력 회의, 지방소멸 관련 전문가 강의, 각계각층 의견수렴, 투자계획 추가·보완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의 기금을 광역에 25%, 기초에 75%를 배분하고, 기초지원계정의 95%는 인구감소지역(89곳), 5%는 관심지역(18곳)에 각각 지원한다.

전북도에는 2022년~2023년 560억원이 배분되고, 인구감소지역인 10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완주 제외)은 투자계획 평가를 통해 평균 140억/최대 280억 원,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익산은 평균 36억/최대 70억원이 배분된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은 2년간 최대 3,430억원까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다.

기금 도입 첫해인 올해 2022년과 2023년 회계연도 사업에 대해 투자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오는 5월까지 행안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평가 및 자문 등을 거쳐 8월쯤 배분금액이 확정된다.

조봉업 도 행정부지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해결을 위한 출발점인 만큼, 내실있고 체감도 높은 기금사업을 발굴해 향후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ASF 감염 멧돼지 남하 양돈농가들 '초비상'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 전북지역 방역상황 점검

도, 438농가 107억 지원 방역시설 컨설팅 실시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멧돼지의 지속 발생과 남하에 따른 양돈농가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전북도의 방역상황 점검을 위해 2일 방문했다.

이날 박정훈 국장은 대한한돈협회 전북도협의회장 등 생산자단체 임원과 동부산악권 6개 시·군 방역과장이 참석한 방역상황 점검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멧돼지의 남하로 중요 '8대 방역시설'의 조속한 설치와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강조했다.

'8대 방역시설'은 방역실, 물품보관시설, 내부울타리, 전실, 입출하대, 방충방조망, 외부울타리, 폐기물보관시설 등이다.

이에, 전북도 한돈협회 임원들은 방역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행정과 협력해 상반기중 8대 방역시설 조기 설치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방역시설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한 107억 6,100만원(438농가)을 배정했다"며 "필요한 방역시설 확충과 시·군별로 실시하는 농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이용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3월 4일 · 5일 사전투표
소중한 권리 행사하세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